

## 미·중관계의 변화와 한반도

### 황 병 덕

(남북협력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

미국과 중국은 오바마 행정부 출범 초기 협력적 관계에서 벗어나서 최근 갈등의 골이 점차 깊어지고 있다. 반덤핑관세 등의 무역분쟁, 보호주의, 환율 등 경제분야는 물론, 외교, 안보분야에까지 전방위적으로 이해관계가 상충되고 있다. 미국정부는 구글과 중국정부의 갈등에 직접 개입하고, 중국 위안화 절상을 요구하고 있으며, 중국 제품에 대하여 각종 반덤핑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러한 미·중 간 경제패권경쟁은 외교안보 갈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2010년 1월 30일 미국정부는 대만에 64억 달러 상당의 블랙호크 헬기, PAC-3 요격미사일 등을 판매하기로 결정하자, 중국은 미국과 군사교류 중단 방침을 선언하고, 대만에 무기를 판매하는 미국기업에 제재입장을 발표하는 등 중국이 패권국 미국 기업을 경제적으로 제재하는 초유의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다. 더욱이 중국 외교부는 주변국들도 중국에 적응하는 법을 배워야 하면서 중국 전략가들은 이번 미국의 조치가 중국의 핵심이익(core interest)을 건드렸다고 언급하였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미국은 오바마 대통령이 달라이 라마를 만날 것이라는 카드를 던졌다. 과거 미국의 대중 공세에 단지 반응적으로 대응하는 수세적 위치에 있었던 중국은 “양측 회동이 중국과 미국관계의 정치적으로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라며 경고하였다. 이러한 미·중관계의 악화는 지구온난화 문제, 글로벌 경제회복, 이란 및 북한 핵문제 해결, 한반도 통일에 깊은 암운을 드리울 수 있다.

금융위기 초반 미·중관계는 매우 협력적 관계를 유지하였다. 2009년 7월 개최된 「미중전략·경제대화」에서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개막 연설에서 “중국에서는 미국이 중국의 야망을 견제하려 든다는 여론이 일부 존재하고, 미국에서 역시 중국의 부상을 경계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고 밝히면서 “나는 이에 대해 다른 견해를 갖고 있다” 며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21세기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며 “미·중 관계가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양자관계”라고 선언했다. 중국 후진타오 주석은 왕치산 부총리가 대독한 개막사에서 “세계 평화와 발전 등 주요 문제에 대해 미국과 중국의 어깨가 무겁다”고 밝혔다. 국제관계 전문가들은 이번 대화가 미국과 중국 주도의 세계 질서인 ‘G2 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신호탄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이러한 미·중 간 협력적 경제관계는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점차 갈등적 관계로 치닫고 있다. 그 동안 미국은 자국의 과소비를 중국의 저가제품 수입으로 충당하였고, 증대 일로의 대중 무역적자를 중국이 미국 재무부 국제 인수를 통하여 보전하는 상호 보완적 관계에 있었다. 그러나 세계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미국 달러가 기축통화로 기능하는 데 대한 신뢰의 위기가 발생함으로써 이러한 보완관계가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는 모순성을 보였고 세계적 차원의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중국은 증대하는 경제력을 활용하여 주변국은 물론, 라틴아메리카, 아프리카까지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으며, 위안화 통화권 구축 등을 시도하면서 달러의 기축통화 위상을 흔드는 한편, 미국 채권 가치에 영향을 주는 미국의 재정적자 확대에 경고를 지속적으로 보내고 있다.

중국은 금융위기를 기회로 경제위기를 겪고 있는 국가들에게 통화스와프 체결, 내수 진작을 통한 주변국의 중국 수출 증대 등을 통하여 지도력을 확보해가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행보는 미국을 대체하는 패권적 질서를 직접 구축하려고 하기보다는 미국의 경제적 헤게모니 약화를 틈타서 국제경제 질서의 다극화를 모색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견지에서 중국내 전문가들은 미국 중심의 국제금융체계 내에서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중국은 지역 금융제도 창설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주문한다. 국제금융위기 극복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미국과 협력해야 하지만, 미국이 경제적 패권지위를 회복하는데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경제 체제의 다극화를 지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동아시아 지역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은 매우 파괴적이다. 2000년-2005년 동아시아 GDP 성장 기여율에서 중국은 50.7%를 차지하고 있으며, 무역 성장률에서도 36%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비율은 중국 경제가 고도성장을 지속함에 따라 점차 높아질 것으로 추정된다. 이것은 중국이 동아시아 국가들을 무역, 투자 등의 관계를 매개로 경제적으로 포섭해 나가면서 실질적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중국은 화평굴기(和平崛起), 조화세계(和諧世界) 등의 대외전략을 통해 중국의 부상이 주변국들의 이익을 해치지 않고 오히려 주변국들의 국익에 도움을 준다는 점을 전파하고 주변국가들과의 관계를 개선하면서 경제성장을 토대로 주변국들을 상호의존관계로 끌어들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오바마 행정부 초기 미·중 관계는 경제협력에만 치중되었을 뿐, 군사전략적 차원에서는 여전히 미국이 중국의 균형화전략과 팽창을 저지하는 차원에 머무르고 있다. 이것은 2009년 8월 미국 16개 정보기관이 공동으로 발표한 '2009 국가정보전략보고서(national intelligence strategy)'에 따르면 러시아, 북한, 이란과 함께 중국을 미국 국익을 침해할 수 있는 국가로 분류한 데에서 잘 나타난다. 특히 이 보고서는 중국이 미국과 많은 이해관계를 공유하고 있지만, 자원외교 강화와 군사 현대화로 복잡한 글로벌 도전을 낳고 있다고 평가했다. 중국의 군사적 도전을 사전에 억제하기 위하여 미국은 대서양과 태평양 간의 전력배비 비율을 역전시켜 60%의 전력을 태평양으로 이동 배치시키고 있다. 더욱이 미국 진보진영 싱크탱크인 미국진보센터(CAP)는 최근 정책 제안서에서 미군이 북한 또는 중국과의 무력충돌, 중동에서의 충돌 등 비상상황에 대비 태세를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동아시아는 미국에게 중요한 전략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지역이다. 미국은 동아시아 지역을 세계적 차원의 이해관계를 지니고 있으며, 또한 안보적·경제적 측면에서 미국의 사활적 국익이 걸린 지역으로 간주하고 있다. 중국의 급격한 부상은 미국의 잠재적 패권에 대한 도전 억제라는 사활적 이익과 상충된다. 특히 지정학적 측면에서 볼 때 해양세력 미국의 사활적 이익(vital interest)은 서남아시아, 인도양, 말라카 해협 등으로 이어지는 중동석유, 상품 등의 해양수송로(shipping lane)라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해양수송로가 중국에 의해 위협을 당할 경우 미·중 패권경쟁은 분쟁으로 변모될 가능성이 크다. 해양수송로가 해양세력 미국의 세력균형적 차원의 사활적 이익이라면, 해양수송로에 근접한 한반도 및 대만 등은 사활적 이익 보호 차원뿐만 아니라 대륙세력 중국을 공세적 방식으로 공략하기 위한 교두보 기능을 하는 핵심이익(core interest)으로 볼 수 있다. 대륙세력 중국은 해양세력 미국을 견제하기 위하여 해·공군력 증강 등 군사혁신을 도모하고 있으며, 미국은 가상적인 대륙세력 중국을 제압하기 위하여 미사일 방어체제를 갖추는 한편, 선제공격까지도 가정한 군사변환 전략을 실행에 옮기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미·중 관계를 보면 한반도는 휴전선을 경계로 미국과 중국이 군사적으로 상호 대치하고 있는 성격을 지니고 있다. 미국과 중국이 상호 협력관계에 있으면 휴전선의 장벽도 낮아질 수 있지만, 최악의 갈등관계에 있으면 북한 핵문제 해결, 북한 유사시 등에서 국제협력이 어렵게 될 수도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북한 핵문제는 북한체제 안보는 물론, 중국 안보와도 밀접한 관계를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미국의 동북아전략과도 관련성을 지니고 있다.



중국은 북한이 핵개발을 하면 동북아에서 대량살상무기 경쟁이 벌어져서 중국 국가안보에 심각한 손상을 가져오는 것으로 이해한다. 더욱이 주변강대국들이 북한 핵문제에 물리적으로 접근하거나 과도한 제재를 가하면 북한 체제 붕괴가 초래되어 중국 안보에 치명적 손실을 가져오게 되는 것으로 파악한다. 미국 역시 북한의 핵개발을 대량살상무기 비확산 원칙 차원과 더불어 대륙세력 중국을 견제하는 차원에서 접근한다. 북한이 핵개발을 완수하면 한국, 일본 등의 핵개발 추진을 야기하여 미국의 동북아지역 영향력 상실을 초래할 위험성이 있으며, 설사 북한과 핵협상을 본격 타결할 시에도 한반도 평화체제 문제, 주한미군 지위문제 등이 논의되기 때문에 미국의 동북아전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북한 핵문제가 거의 20여년 동안 해결되지 못하고 풀기 어려운 국제문제로 등장한 이유는 바로 미·중 간의 전략적 이해가 한반도에서 상치되었던 점이 주요 원인이다.

중국이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초강대국에 상응하는 자기 목소리를 본격적으로 내고 미국이 약화되는 패권적 지위를 유지하고자 중국을 강력 견제한다면 협력과 대립의 미·중 관계는 패권갈등 관계로 치닫기 쉽다. 이 경우 한국은 사회경제적으로나 안보적으로도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한국의 대중 무역의존도는 대미의존도 9%보다 훨씬 높은 23%로서 향후 한국경제는 성장 엔진을 멈추고 있지 않는 중화경제권의 블랙홀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그러나 우리는 중국의 정치체제보다 발전된 민주주의를 지니고 있으며, 이러한 체제유지는 미국의 한반도안보 공약에 상당 정도 달려 있다. 동아시아 국제질서가 협력적이라면 한반도 주변 국제환경은 한반도 통일 및 국가발전에 우호적일 수 있다. 그러나 미·중 갈등이 첨예하게 나타난다면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성 확대와 안보의 대미 의존 간의 괴리가 발생할 수 있다. 더욱이 미국의 중국 견제가 심해지거나 중국의 강대국 정치를 본격적으로 실행에 옮기면 북한문제에 대한 중국의 개입도 안보적 측면에서 배가될 것이다. 따라서 미·중 관계 변화를 대비하는 차원에서 한반도 통일과 민주적 국가발전에 요구되는 한반도 주변환경을 창출할 수 있는 외교안보적 발상도 소홀히 할 수 없는 부분이다.

